

# 흔들리는 비박계... 차 노림수 통하나?

### “일단 여야 합의 지켜보아”... 친박계는 기세등등 ‘돌변’ “탄핵 중지하고 여야 협상 시작해야”

‘탄핵 단일대오’를 외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29일 국회에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비박계가 흔들리자 친박계는 회심의 미소를 날리며 대역공에 나서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정병국 김재경 이종구 권성동 홍문표 이은재 박인숙 하태경 이진복 장제원 김성태 의원 등 비박계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뒤, 30여 분간 비공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의중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나경원 의원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좀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즉각적 탄핵 입장에서 한발 멈춰섰다.

하태경 의원 역시 “국민의 눈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12월2일에는 국회가 하야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국회가 일정 부분 방법을 제시했으니 그걸 수용하는지 보고 하야절차를 진행되면 되고, 국회합의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즉각 탄핵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비박계의 결기가 순식간에 쪼그라든 모양새가 확인됐다.

반면 친박계는 일제히 ‘탄핵 중지’를 외치며 공세적 모드를 돌변했다.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국민의 뜻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의견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시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 대통령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을 모아 처리하면 된다”고 여야간 대통령 퇴진 일정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야당에 탄핵 중지를 요구했다. 그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다 결정 해주어라”고 주장했다.

서청원 의원 역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얘기한 이상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것”이라고 탄핵 중지를 주장했다.

비박계가 크게 흔들리자 새누리당을 선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박계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 순간까지도 자기 처지를 모면해보고자, 온갖 용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어렵도 없는 소리”라고 박 대통령을 힐난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겨 어쩔쩔 할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어렵도 없다”며 “국회는 법대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탄핵

을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지사도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금 시간이 없다”며 “시간이 금이다. 국회는 계획대로 12월9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박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남 지사는 특히 “탄핵찬성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의원들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국민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은 조건없이 사퇴하고, 탄핵은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비박계의 탄핵 단일대오를 깨지 말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 3야, 박 담화 거부... “탄핵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에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일제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절차를 계속 밟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하야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추 대표는 “우리는 헌법이 정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헌정 수호 양심에 따라 탄핵발의 서명을 시작했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는 국회의원의 마음을 모아서 탄핵 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갈 것”이라며 탄핵 표결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박 대통령 담화 후속대책은 의총에서 논의하고 준비된 탄핵서명을 하겠다”며 일단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합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며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이나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국회는 여야로 구성됐는바 현재 여당 지도부와 어떤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한 통치자”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3차 담화에는 5대 술책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겨 새누리당 탄핵대오를 교란하고 개헌논란으로 야권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뉴시스

### 검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जे 어려워”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박 대통령 조사는 향후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어제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명 변호사로부터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유 변호사는 검찰이 29일로 제시한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진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특검 후보 추천이 임박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 후보가 오늘 추천되고, 이후 임명까지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특검의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수사를 종료한 것은 공판을 해야 하고, 종료 안 된 부분은 특검에 인계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전까지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인계) 시기에 대해서는 임명된 특검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중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하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내정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 야3당, 탄핵 소추사유 ‘제3자 뇌물죄’ 포함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안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소추사유에 ‘제3자 뇌물죄’ 등을 넣을지 등 쟁점을 놓고 각 당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마련 중인 탄핵안 초안은 헌법 위반 부분에선 대체로 같은 내용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위반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갖고 탄핵안 초안 중 소추사유에 직권 남용죄와 강요죄 외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냈다.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뇌물죄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므로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아니라 추가적 고려사항으로 기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뇌물죄 부분까지 소추 사유로 넣으면 현재의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의당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물론 돈을 건넨 재벌들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소추사유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 논란이 탄핵안에 포함될지도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세월호 7시간 논란 역시 초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의와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탄핵 찬성 가담 등을 고려해 세월호 7시간 논란을 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도부는 이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문제를 소추사유로 기재하는 데 찬성하면서도 이를 추가적 고려사항으로만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뇌물죄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로 인해 현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민주당·정의당, 포함 국민의당, 추가적 고려사항

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세월호 문제를 탄핵안의 4개 주요 소추 사유 중 하나로 다루고 있어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야3당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의 행보도 주목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안에 세월호 문제를 포함시키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라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이날 중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비박계 의원들과 공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